

##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앤 크루커

과거 미국의 무역정책은 다른 나라의 입장이야 어떻든 간에 다자간 개방무역체제에 철저히 집착하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1980년대 이후로는 GATT, 그리고 현재는 WTO에 참여하면서도 교역상대국들과 개별적인 1대1 협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1대1 협상은 많은 나라들과 진행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식을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상대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역법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역상대국 무역당당각료들과의 회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국 미 무역대표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다분히 구제를 '요구'하는 듯한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 무역정책과 수단을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1대1 방식이라는 점, 미국이 상대국의 행동만을 요구한다는 점, 반면에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상대국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바로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정책, 특히 일본에 대한 일방적 무역정책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선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는 그 어떠한 차별적인 무역협정이나 무역행위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별적인 행위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자신의 이익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개방적인 다자간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불평도 다자간 방식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야 하

는 이유를 우선 설명하고, 1980년대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 체제가 발전해 온 점을 개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재 미국의 변화를 설명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그 이유를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을 다룬 후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자간 개방무역체제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 특히 영국인과 미국인들에 의해서 세계대전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 전후 국제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쟁적인 평가절하, 미국의 Smoot - Hawley 관세법,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근 궁핍화 (beggar-thy-neighbor)' 관세 등과 같은 대공황의 생생하고 쓰라린 기억들은 모두 교역상대국의 희생을 통해 자국의 고용을 증대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이것들은 자국의 국내 수요와 고용을 오히려 감축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국제경제를 붕괴시켰던 이러한 행위들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까지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더욱 격화시킨 것은 틀림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브레튼우즈체제의 기본원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방패로 삼아 국제통화체제를 세움으로써 환율조정(여기에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금지하는 것과 근본적인 불균형에 빠진 나라에 대해서는 환율의 재조정을 허용하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무역기구(ITO)를 세워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이 비준되지는 못했지만 무역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은 미국 행정부의 명령(Executive Decree)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에도 논의되는 무차별 교역(최혜국대우 원칙), 비관세장벽 제거의 약속, 조약국들이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조항, 분쟁해결절차 등 핵심적인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GATT하에서 계속되었는데 협상당사국들은 교역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는 대가로 자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협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관세양허에 합의를 보게 되면, 최혜국대우 조항과 무차별 조항에 의해 모든 협상국들에게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관세율은 이후 고정되도록 하였는데 면책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관세를 다시 올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각국이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얻어내려면 자국의 관세를 양허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무역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것이었으며, 그만큼 관세는 그들 자신을 속박하는 가장 해로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점차 일방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적인 양허(reciprocal concessions)의 원칙은 강조해 두어야 할 중요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협상이 상호적인 경우에 수출업자들은 협정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식의 경우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다자간섬유협정의 보호조치를 10년 이내에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다 쉽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기계류 수출업자들이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기대하고,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GATT가 어떤 나라 혼자서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자유화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경제학’을 표방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호조항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출의 이익이 발생하여 정치적으로 지지를 보내게 된다는 의미에서 ‘좋은 정치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GATT와 이어서 개최된 다자간 협상라운드 하에서 세계경제가 급속히 발전했다는 점을 한국인들에게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1948년 딜론라운드(Dillon Round) 이전의 유럽은 관세는 물론 수량규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통화는 태환성도 갖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수량규제와 환통제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재화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Smoot-Hawley 관세법을 포함 40%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딜론라운드 이후 세계경제는 오랜 기간동안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약 25년동안 세계의 실질 GNP 성장률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자주 지적한 바와 같이 1963년부터 1973년까지 10년동안 한국은 19세기에 다른 나라들이 이룩하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1인당 실질 GNP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이만큼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바람직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무역자유화는 더욱 더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교섭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관세인하는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가져왔고 다시 관세인하가 이어지는 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40%에 이르던 관세는 1990년대 초반에는 6%를 밑도는 정도까지 인하되었습니다. GATT는 제조업분야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sup>1)</sup>

무역이 세계경제성장의 추진력이었음은 기본적인 통계만 조사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과 1960년 사이의 10년 동안 세계무역은 연평균 8%씩 성장하였고 세계 GDP는 4.5% 정도씩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과 1970년간의 10년동안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무역은 10%, 세계 GDP는 5% 가량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미국은 GATT와 무차별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옹호자였습니다. 실제로 GATT 조항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영국과 논쟁을 벌였는데 바로 GATT 24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특정한 조건<sup>2)</sup>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혜무역협정을 허용한다는

1) GATT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 이 분야의 무역장벽과 그로 인한 왜곡은 다자간 섬유협상을 제외한 제조업분야보다 훨씬 심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무역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중심적인 사안은 아니다.

2) 이 조건은, ① 특혜협정은 조약국간의 100% 관세인하를 보장한다; ② 실질적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위의 두 조건을 달성하도록 하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것이었는데 대영제국을 고수하려는 영국의 입장에서 비롯된 조항에 대해 미국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물론 1940년대 후반, 미국은 세계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무역문제에 관한 쌍무협상에서 가지는 힘은 분명히 강력한 것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은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제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대외정책, 즉 군사전략적인 차원에서 동맹국들에게 건설한 국제경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미국과 세계경제를 위해 최적이라는 데 대한 진정한 믿음이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100%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개방되어 있었으며 미국의 무역장벽은 상대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동조합조차 자유무역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 균열이 생긴 것은 1970년대가 처음인 듯합니다. 처음으로 소수 의견의 보호주의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이는 즉시 부결되었습니다. 1974년 종합무역법안(Omnibus Trade Bill)은 다소 보호주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교역상대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다자간 섬유협정이 보다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를 통틀어서 보면 보호주의적 압력으로 인해 개방적인 다자간체제에 대한 지지가 결코 약화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에 걸쳐 개발도상국들이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제정을 요구했을 때 당시 미국은 이 원칙에 의거해서 특혜에 반대하였던 바, 결국 197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개방적인 다자간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조치와 이로 인해 발생한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누적이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세율을 인하하면 공급사정이 좋아짐으로써 재정적자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정의 부담

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했고 미국 달러는 엄청나게 가치가 뛰어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었으며 미국은 그것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sup>3)</sup>

교역부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이후 4년간 달러의 실질가치가 30% 이상 상승했던 시기에 극에 달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와 경상수지적자는 갑자기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던 여러 산업부문에서 보호주의 요구가 강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물론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지배적인 지위는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에 따라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전에 난공불락의 지위 -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 - 를 누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극심한 대외경쟁에 시달려야 했으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제시장의 주요한 자본공급자의 지위로부터 경상수지적자국으로 전락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가 약화되면서 '추락하는 거인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인 지위의 하락은 이 체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또한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다자간체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분적으로 흔들렸던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눈사태처럼 밀려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부문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 자동차산업이 고전을 겪게 되자 미 의회는 자동차의 대미수출에 대한 제한과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1980년대 초반에는 수출자율규제협정(voluntary export restraint)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은 처음으로 '유인가격(trigger pricing)'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

---

3) 미국의 보호주의적 압력이 가장 거세었던 것은 달러가치가 가장 올랐을 때와 실업률이 가장 높았을 때였다는 증거가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1981년과 1984년에 나타났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었고 동시에 미국의 달러화는 실질가치로 볼 때 급속하게 상승하였던 것이다.

고 수출자율규제는 여러 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82~83년에는 반도체산업이 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1986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조치들은 모두 GATT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며 쌍무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았던 일들이 크게 확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2년 GATT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임명된 미국의 무역대표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도 거의 없었고 의사일정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런 제안에 직면한 여러 나라들은 이 문제에 관한 각료회의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참모진의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자유무역에 대한 관심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한 미 무역대표는 개방적인 다자간체제에 대한 100% 지지를 포기하고 대신에 양동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가능한 한 GATT를 강화해 나가면서 뜻이 맞는 교역국들과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무차별주의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선언이었습니다.<sup>4)</sup>

제도상의 견지에서 보면 1979년과 1984년 미국의 무역법안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항을 강화해서 즉각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 마진을 판정하는 책임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재무부로부터 보다 보호주의 지향적인 상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 결정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다자간 섬유협정에 대한 제한이 이전보다 강화되어 수입증가에 제약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국가들이 농산물분야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밀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수출증대법(Export Enhancement Bill)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의미하는 단어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로 부터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에서 사용했던 '자유롭지만 공정한(free

4) 거의 동시에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는 등 카리브해 연안국들에 대한 특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GATT 원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다자간 섬유협정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but fair)' 무역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달러가치 상승(미국의 교역재에 대해 가장 강한 압력을 가했던 것은 환율이었다)은 1986년에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개방적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제도적·이념적 지지가 크게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부분적으로 의회의 지지를 받아가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쌍무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상이 진행된 이슈들은 이미 미국에 의해서 회의록에 상정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들 조치에 대해 미국은 보다 더 개방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할 도덕적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자국의 정책은 보호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수사적 표현이 이러한 국민적 감정에 잘 맞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리 보호(administered protection)'는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6년 이후 달러 가치가 하락한 후에도 이미 시행된 불공정성과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청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미국의 지지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8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Bill)은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교역상대국의 무역행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무역조치를 취한 나라와 행태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슈퍼 301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역대표부는 다른 나라들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해 조사하고 불만스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국 정부와 쌍무적으로 협상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상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무역대표부는 교역상대국의 지정된 수입품목에 대해 보복관세(punitive tariffs)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ATT는 위반사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슈퍼



301조는 GATT규정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GATT하에서는 관세에 대해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미국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GATT에 의해서 제재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에게 중요한 문제이면 무엇이든지 제기함으로써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무역관행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의 압력에 굴복함에 따라 결국 브라질, 인도, 일본 등 3개국만이 '불공정국가'로 지정되어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슈퍼 301조는 1990년 무역법안에서는 빠졌으나 1994년 겨울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 행위로의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대국의 행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파고드는 반면에 교역상대국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에 대해 취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상호적인 양허를 받아낼 만한 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이율배반성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슈퍼 301조 법안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상중인 상황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WTO하에서 서비스, 농산물, 지적 소유권 등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GATT 체제의 허점에 대한 많은 미국인들의 불평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조치가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일본과의 무역마찰

이미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은 철강과 자동차에 관한 일본의 수출 자율규제를 1980년대 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86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 행정부가 일본과 반도체협정을 논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협정에는 많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

나가 일본기업은 칩을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기업이 그 가격 이하로 제3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이 자국반도체 시장의 20% 이상을 외국제품이 차지하는 것을 양해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밀문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공개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방적인 조치 중 최악의 것입니다. 미국은 GATT 체제 밖에서 일본과 협상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3국에 대한 판매가격까지 인상토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이 곧바로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 협정 중 제3국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3국 조항 삭제와 거의 동시에 세계는 반도체 부족을 겪게 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할당받을 수 없었습니다. 20% 시장점유조항만을 남긴 채 나머지 협정은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과연 수입품의 20% 시장점유에 동의했느냐가 논쟁거리입니다. 명확한 것은 그 협정이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는 '전략부문 시장개방(MOSS : market opening strategic sectors)' 회답이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무역행태가 열거되었습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은 이러한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밝히면서, 과거 회답은 행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후 일본에 대해서 '수량적 지표'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협상의 결과 미국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에 관한 일본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딜러 관행이 변화되어야 한 다든지, 미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생산업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요구 중 특별한 사항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일 이내, 즉 금년 6월말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슈퍼301조에 의해 100% 제재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입니다.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WTO 하에서의 의무와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을 WTO로 끌고가겠다는 것이지만, 미국

은 도리어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인해 관세양허가 무력화되고 손상되었음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일방적인 조치들을 밀고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국제무역법률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일본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에 비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이 한국과 국제경제체제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인들은 일본에게 왜 그러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정책 중에는 WTO에서 협상할 만한 문제인 수입에 대해 차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유럽의 정책도 미국 내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불공정이란 표현과 함께 가장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대단히 큰 교역국이고 일본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수지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의 정치·경제적 시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의 경상수지 상황은 저축과 투자결정의 함수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변화는 저축-투자 균형의 변화가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쌍무적 균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면 결국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게 될 뿐이고 일본의 환율관계에서도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미국의 일본 및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또, 미국 미숙련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러스트 벨트(Rustbelt : 미국 피츠버그 등 중서부지역과 북동지역의 강철산업 중심지)의 미국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일본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추락하는 거인 신드롬'처럼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보호주의자들이 일본의 '불공정성'에 대해 미국의 대중과 정치가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보호주의를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극히 최근까지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일본이 아니라 유럽이었는데도 미국의

압력이 일본에 가해진 것은 유럽보다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더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한국에 미칠 영향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은 다른 개방적인 무역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압력에 열중하는 한, 세계 모든 경제를 위해 그토록 중요한 개방적인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간의 갈등을 쌍무협상이 아닌 WTO체제내에서 다루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가지 점에서 고비에 서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과 일본간의 분쟁은 WTO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다자간무역체제가 자동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성장을 건전한 국제경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WTO체제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한국은 미국과의 사안별 협상에 의존하기보다는 WTO하에서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게임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도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을 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만족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미국의 압력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정도를 뛰어 넘어서 오히려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조치를 요구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할 때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가 포함되기 마련인데 그 경우 제3국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교역상대국과 미국간의 협상 결과가 하나의 부산물로 한국에게 영향을 미쳐서 한국은 손해를 입게 되는 제3국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미국이 사안별 협상 방식에서 성공한다면 개방적 다자간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약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무역대표부와 일본간의 협상의 결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미국의 수출업자가 믿게 되면 그들은 다자간 협상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적어지면 지지도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가들은 보다 일방적인 방식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초창기에 보여주었던 개방적인 다자간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약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나 그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개방적인 다자간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쌍무적인 방식이 아니라 WTO 기구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갓 태어난 WTO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적 외교적 지지를 보내야 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일방적 압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한국의 무역 및 기타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행위를 유효하게 차단하는 두번째 방법은 미국의 압력에 앞서 한국도 국익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절차를 밟은 수입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이 방해받지 않도록 규제들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압력단체들에게 공격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방적인 미국 통상정책의 압력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대부분의 큰 교역국들보다도 이 방식을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일방적인 압력을 덜 받았습니다.

일본과 미국간의 자동차차부품에 관한 마찰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지 간에 다자주의와 일방주의간의 근본적인 이슈는 무역정책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며 건전한 최혜국대우제도를 위한 또 하나의 기초인 지역특혜무역그룹(regional preferential trading groups)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국제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하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체제의 최대수혜자인 한국과 같은 나라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 체제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이 체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반세기 이상 동안의 건전한 경제환경을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새로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를 보내야 하며 분쟁의 해결도 다자간 방식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 토 론

**질 의** 왕 연균 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일본에 대해서 수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MIT대학교의 돈부쉬(Dornbusch)교수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수량적 접근이 다른 접근방법에 비해서 실제적이고 유효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법은 일본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크루거 교수께서는 일본의 무역수지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응 답** 크루거 교수

본인은 많은 이유 때문에 수량적 목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수량적 접근을 위해서는 미국도 원하지 않는 관료적 개입과 같은 것이 필요하며 일본 행정부의 누군가가 목표를 정하고 쿼터를 배분한 후 기업들이 이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반도체협정에 따라 모든 일본의 대기업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수입을 정확히 20% 늘려야 했지만 소규모 기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산성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할 때까지는 그 협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도 아니고 효율적인 무역도 아닙니다. 실제로 칩 생산의 비교우위가 변화해서 미국은 보다 고성능의 칩을 수출하고 있으며 20% 목표도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둘째로 특정국가가 소비하는 어떤 상품 중 얼마만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느냐에 관해 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외교적으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절차 및 과정에 대해 다자간에 합의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해결의 절차와 힘을 가진 WTO에 제소하면 됩니다. 본인이 미국의 한 변호사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일본기업과 딜러간의 관계가 미국기업과 딜러간의 관계에 비해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인정한 협정이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주장하는 바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협상의 의제로 자동차부품을 들고 나온 것은 본인이 보기에 시장에 기초한 개방경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문의 카르텔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에 위반되는 관행이 있다면 WTO체제 내에서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속이고 있다고 우리들 중의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WTO에 가지고 가서 평등하게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일본이나 유럽같은 나라들도 대항하게 되고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무역전쟁이 일어나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투자에 비해서 저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저축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특히 공공부문이 마이너스 저축의 큰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경상수지는 국내지출과 국내소득의 차이와 같으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소득보다 지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보호조치들도 무역수지적자나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대미 수입을 100억 달러 정도 늘인다고 하더라도 최단기적으로 적자감소효과가 있을 뿐 무역불균형 해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조정과 함께 미국의 대일수입이 늘어날 뿐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조치들에 의해 100억 달러 중 대부분은 낭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불균형을 스스로 치유해야만 합니다.

#### 질 의 조 순환 의원 (국회의원)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최근 NAFTA와 EU를 통합하는 범대서양 자유무역지역(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창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크루거교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 TAFTA와 같은 기구가 공식화되면 중국, 일본, 한국과 ASEAN은 반서방 경제동맹을 추진하려고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평해 주십시오.

#### 응 답 크루거 교수

중첩되는 무역지역에 대한 구상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본인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과거에도 TAFTA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NAFTA와의 통합구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TAFTA, NAFTA, APEC 등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여러가지 중첩된 무역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은 듯합니다. 본인의 견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TAFTA, NAFTA, APEC에 참여한다면 왜 그 문제를 WTO에서 다룸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문제는 복잡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동맹이 아니며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규정은 따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들이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을 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은 원산지규정을 다루는 변호사들일 것입니다. 이는 세계무역에 있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EU가 공존했을 때 제조업에 관한 한 자유무역협정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EFTA의 수출업자들이 EU의 원산지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5~6%의 관세를 부담하는 편을 선호했다는 추정결과입니다. 원산지규정을 지키는데 드는 비용이 CIF 가격의 5~6%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많은 수출업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원산지규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자유무역지역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일본간의 논쟁이나 세계경제가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 질 의 이 갑수 박사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에 근무하는 어느 경제학자는 Asian Wall Street Journal 신문에 기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제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서투르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자동차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미국제품보다 4배나 높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망 확대에 관한 요구만을 받아들인 채 자동차부품에 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일본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 응 답 크루거 교수

본인은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을 뿐입니다만 클린턴 행정부가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전개되리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일본이 클린턴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될 어

편 것에 동의하고 클린턴은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식이지요.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일본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결국 100%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리라고 생각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의 행동이 WTO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일본측의 주장을 WTO가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일정표에 따라 WTO가 조사를 진행시키면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전 중반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반 유권자들은 무역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며, 설령 분쟁이 해결된다고 해도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방법입니다.

### 질 의 이 상설 사장 (월정 인터내셔널社)

한국은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의 입장이 될까요?

### 응 답 크루거 교수

본인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역분야 전문가가 공개된 포럼에서 한 발언을 보면 한국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WTO에서의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무역체제를 해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만장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입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 마찰이 한국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번 무역분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커다란 착오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분쟁은 계속 일방주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득을 얻으려는 사고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질 의 질 뒤프렌즈 상무관 (주한 프랑스대사관)

크루거 교수께서는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미·일간 특혜협정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일본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응 답 크루거 교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정문에는 모든 나라들이 금융서비스 부문 개방계획에 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 이 문제가 협상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 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제라고 봅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장벽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 서비스별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현재에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제시하지 않는 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차별주의 원칙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일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소 낙관적이어서 단기일내에 해결될 것이고 체제도 순항하리라고 봅니다. 일방적 태도에 대한 반대는 분명합니다. 6월초의 계획보다 상황이 악화되지만 앓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질 의 질 전 상준 박사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미국이 한국과의 쌍무협상에서 가하는 압력으로 볼 때 한국이

계속 늘어나는 요구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WTO 체제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들과 협상하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권고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응답** 크루거 교수

이 문제는 두가지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한국의 무역담당관리라면 미국이 포착해낼 정보가 무엇인가를 미리 찾아내고, 미국이 제기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일방적 행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WTO를 외교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질서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한걸음 물러나서 WTO가 잘 운영된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국가들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관해 건설적인 지원이나 생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WTO의 관계자들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장 큰 교역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국과 같은 중요한 교역국들이 WTO체제를 지지하는 주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제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과 같은 나라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의** 왕 연균 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저는 세계무역의 불균형이 해결되기를 오랫동안 기대해 왔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은 무역수지적자를,

미국은 흑자를 거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올 것이며,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흑자는 일본인구의 노령화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 답 변      크루거 교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국제경제학 시간에 읽은 책중에 『달러부족(Dollar Shortage)』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경제학 책들은 대부분 미국이 항상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결코 미국과 경쟁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공부하던 때에도 미국의 압도적 지위는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세계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인구의 노령화를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인상적인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환경이나 수준을 볼 기회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자신들의 열악한 도로, 학교, 주택상황 등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번째로 일본의 관행이 미국의 주장대로 반경쟁적인 것이라면 일본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만일 본인이 미 무역대표라면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산업을 카르텔화하고 반경쟁적인 것으로 만들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이었지요. 일본이 무언가 제한적인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이 잘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의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방하여야 합니다. 개방한다는 것은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무역분야로부터 국내재로의 더욱 더 많은 자원 이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저축을 줄이고 경상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사 회** 사공 일 박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미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거 교수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역대표부의 대표로 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경제학회 회장으로서 크루거 교수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